

|       |                                             |       |                        |
|-------|---------------------------------------------|-------|------------------------|
| 보도 일시 | 2023. 2. 22.(수) 11:00<br>2023. 2. 22.(수) 석간 | 배포 일시 | 2023. 2. 22.(수)        |
| 담당 부서 | 노동정책실<br>노동현안추진반                            | 책임자   | 과 장 박수연 (044-202-7507) |
|       |                                             | 담당자   | 사무관 박지영 (044-202-7625) |

## 이정식 장관, 노동계 원로들로부터 노동개혁 방향 의견 경청

- 전체 노동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계의 전향적 협조 당부
- 개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사, 청년, 학계 등 분야별 소통 행보 본격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2일(수) 노동계 원로들로부터 노동개혁 추진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일시·장소) 2. 22.(수) 11시, 은행회관 16층(서울 명동)

간담회에는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노진귀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원보 전 중노위 위원장 등 노동계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6명의 원로가 참석하였다. (가나다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동계 원로들로부터 조언을 청취하고 노동계 차원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대 노총에 몸담았던 노동계 원로들을 초청하여 개최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노사관계도 더 이상 과거의 전투적 노동운동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며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맞게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며, “정부는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금년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이 ‘노조 탄압’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길은 특정 집단이나 소수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통 노동자, 취약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생과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노동조합도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월 9일 고용노동부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노동개혁 추진계획과 향후 추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진솔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부는 이번 노동계 원로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영계·청년·학계 전문가 등 분야별로 본격적인 소통 행보를 추진해 각계 각층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1) 노동계 원로 간담회 개요

(붙임2) 간담회 참석자 명단

(붙임3) 장관 인사말씀

**붙임 1****노동계 원로 간담회 개요**

□ **일 시:** '23. 2. 22.(수) 11:00 ~ 12:3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16층)

□ **참석자**

○ (고용부) 장관, 대변인, 노사협력정책관 등

○ (노동계 원로) 6명 [붙임2]

□ **진행순서**

 **기념촬영 및 인사말씀까지 공개** (이후 비공개)

| 시 간         |     | 순 서          | 비 고     |
|-------------|-----|--------------|---------|
| 11:00~11:02 | 2'  | 기념촬영 등       | 참석자     |
| 11:02~11:07 | 5'  | 인사 말씀        | 장 관     |
| 11:07~11:12 | 5'  | 노동개혁 추진방향 설명 | 노사협력정책관 |
| 11:12~12:28 | 76' | 토론 및 오찬      | 참석자     |
| 12:28~12:30 | 2'  | 마무리 말씀       | 장 관     |

| 연번 | 성명    | 경력                                                                       |
|----|-------|--------------------------------------------------------------------------|
| 1  | 김 동 만 | 現)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이사장<br>前)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br>前) 한국노총 위원장                 |
| 2  | 노 진 귀 | 現) 한국퇴직자총연합회 이사<br>前)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br>前)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 3  | 문 성 현 | 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br>前) 민주노동당 대표<br>前)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
| 4  | 오 길 성 | 前)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br>前) 민주노총 부위원장<br>前) 민주노총 민주화학섬유연맹 위원장                |
| 5  | 이 병 균 | 前) 한국노총 사무총장<br>前)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br>前)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
| 6  | 이 원 보 | 現) 노사발전재단 이사장<br>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br>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br>前) 한국노총 섬유노련 기획국장 |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 오늘 존경하는 노동계 원로분들을 모시고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 바쁘신 와중에 귀한 걸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하셨듯이,
  -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이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법·제도·관행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동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 법은 우리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당연한 상식임에도  
그간 우리는 이를 경시해 왔습니다.
  - 상식이 무너지는 노동 현장에서는  
그 어떤 좋은 제도와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없고  
상생과 연대의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부당한 노사 관행을 근절해  
법과 원칙부터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필요한 입법·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받으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 법 적용에 있어 어떠한 예외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금년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 회계 투명성은 조직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노조가 껌껌이 회계를 고수한다면 조합원은 물론, 청년,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자기 성찰과 재도약의 계기로 삼고 적극 협조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 우리 노사관계도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전투적 노동운동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 우리 노사관계의 근간인 '87년 노동체제는 과거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에 저항하면서 형성된 만큼 대립적·전투적 관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ILO 기본 협약 비준 발효 등 노동기본권이 국제 수준에 맞게 보호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 죽고 나 살자'식 관계로는 우리 모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 서로가 공동운명체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참여와 협력, 상생과 연대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길입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어제 환노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개정안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의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하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입니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파업은 일상화될 것입니다.
- 힘 있는 대기업·정규직 노조와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 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고, 기업 경쟁력 약화로 청년들은 일자리 불안을 겪을 것입니다.
-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진정한 약자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만, 일각에서는 '노조 탄압이다, 노·노 갈등 조장 의도다'라고 주장합니다.

- 오로지 미래세대와 국민만 바라보며 추진하는 개혁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길은 특정 집단이나 소수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 힘의 부족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다수의 보통 노동자, 취약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생과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도 자기 혁신이 필요합니다.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상생·연대의 정신으로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도 고민해야 합니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무조건적 반대나 당장의 유불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전체 노동자와 미래세대,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책임 있는 경제·사회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 정부도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토대로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파견 등 낡은 노동규범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실함으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 그간 노동계는 노동시장의 주체이자 개혁의 파트너로서,  
우리 경제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 오늘 여기 계신 원로 여러분께서는 그 선두에 계셨던 만큼  
노동계 선배로서 그간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정부와 후배들에게 노동개혁의 성공과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정부도 사회적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노·사를 비롯해서 청년,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